

# 시골 외국인 인부들, 화재사각지대 내몰려

### 지난 봄 불난 비닐하우스에 또 조립식 패널로 지어 '불법건축물 기숙사 사용금지' 법 규정 없어... '악용' 단속해도 과태료 내고 버티면 그만... 불법 양성화

시골 미나리 농장에서 머물며 일하는 외국인 인부들이 올 봄 불난 비닐하우스 숙소로 또 내몰려 화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관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데려 오지만 현행법상 임시 기숙사 운영 규정과 허술한 제도 때문에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1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들녘 한 복판에 자리한 미나리 농장. 이 일대 농경지 430ha는 연간 100억 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들미나리 특용작물 재배단지로 유명하다.

지금 같은 9월이면 벼 수확을 일찍 마치고 겨울 미나리 정식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일과가 시작된다.

무릎까지 빠지는 야외 수렁에서 종일 일해야 하는 척박한 작업 환경 때문에 내국인 농작업 인부들은 이곳에서 일하기를 꺼려한다.

결국 여느 농촌처럼 일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빈 틈을 외국인 인부들이 메우고 있고, 사실상 힘든 미나리 농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적의 인부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짜리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해 현지에서 머물며 일한다.

앞에 농장주들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이들 인부들이 생활하는 숙소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 보험가입도 안될 뿐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패널로 지어져 불이 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8일 오전 9시에 들녘 한 복판의 미나리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던 외국인 인부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불이 나자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순식간에 숙소가 모두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던 외국인 인부 5명은 인근 농경지로 재빨리 탈출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에 탄 하우스 안에 또 조립식 패널로 숙소를 새로 짓고 외국인 인부들을 지내게 하고 있어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화재로 외국인 인부들이 사망했다면 국가 간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숙소 건축물을 갖춘 농장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겉으로 보면 농사짓는 비닐하우스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은밀하게 감춰진 조립식 건물에서 지내는 외국인 근로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위장한 불법 건축물이 외국인 인부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조립식 건축물은 지난 4월8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돼 다시 지은 건축물로 확인됐다. 이곳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 콘크리트로 바닥을 포장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지자체가 하는 단속에 걸려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1년 단위로 내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가 최근 미나리 농장 한 곳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했지만 단속의 실효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들이 과태료 부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장주들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할 때 기숙사를 제공하는 조건을 내세워도 기숙사 시설이 불법건축물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도 불법을 양성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유일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기숙사의 형태가 주택 또는 컨테이너인지 구분해서 제출·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사용

자(농장주)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거주에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미나리 농장의 외국인 인부들이 머무는 숙소와 같은 건축물상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여러 번 등·난방 시설을 갖췄는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의 형태가 주택이나 컨테이너나 등을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불법건축물 유무까지는 고용노동청이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서 '미성년 입장 금지' 명령 어긴 PC방 잇단 적발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의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PC방이 잇따라 적발됐다.

2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PC방이 미성년 초등학생들을 손님으로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PC방은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측은 초등학생들이 '행정명령 곧 종료되니 입장해도 된다'며 고집을 피웠고, 종업원이 일말결에 입장을 허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집합제한 조치를 어겼다고 판단, 해당 PC방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전남 오후 2시를 기해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PC방과 게임방·오락 시설의 출입제한 나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음식 판매와 섭취도 2인 미만에 국한해 허용했다.

앞서 집합금지에서 제한 시설로 완화된 지 나온 만인 지난 14일에도 광주 광산구 한 PC방이 청소년 출입을 허용, 적발되기도 했다.

## 광주 만화방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발견...경찰 수사

광주의 한 만화방에서 결제 대금으로 받은 5만 원권 지폐가 위폐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만화방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발견됐다는 종업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지폐가 컬러프린트 기기를 이용, 일반 용지에 인쇄해 조잡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위폐 발견 직전 해당 만화방에는 손님 3명이 오갔으며, 이들 모두 5만 원권으로 결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 위폐를 건넨 이가 누군지 추적하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위폐에 묻은 지문 감식을 의뢰, 정확한 위폐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 인터넷상에 여성 나체사진 게시한 20대 실형 1년

인터넷상에 여성의 나체사진 등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시법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피해자 B(20·여)씨와 나는 성적인 대화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실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인천해경, 술취해 월미도 앞바다에 빠진 20대 여성 구조

음주 후 인천 월미도 앞 바다에 빠진 20대 여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51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월미도 앞바다에서 술에 취한 A(24·여)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일행들과 월미도에서 술을 마시고 바닷가로 내려갔다가 물에 빠졌고 나머지 일행 2명이 구조차 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인근 행인이 신고했다. 일행 2명은 자력으로 물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보트를 이용해 곧바로 구조한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소방은 저체온증을 보이는 A씨에 대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양손에 찰과상을 입은 일행 B(27·여)씨를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다.

## 환경단체 "광주 학교·관공서에서 석면 검출"

### 교육당국 "법적 허용치 내 수치...별도 검사 의뢰"

광주 한 구청과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인터넷과 시중에서 판매 중인 20개 백시멘트·황토모르타르 제품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6개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단체는 해당 제품이 쓰인 광주 광산구청 지하 1층 구내식당과

광주 남초등학교의 개축 공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광산구청 지하1층 구내식당 벽면 벽돌공사 시공현장 0.25%, 광주 남초등학교 시공현장 3곳에서 각각 0.25% 미만·0.5%·1% 미만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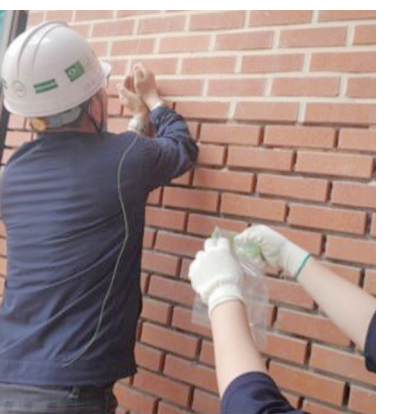
법적 허용치인 1%를 초과하는 결과는 없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석면의 한 종류인 '트레몰라이트'는 타 석면과 비교해 입자가 작고 날카로운 호흡시 폐에 깊이 박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은 "광주 지역 다른 학교와 관공서 공사 현장에도 석면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의 건강을 고려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허용치 범위 내 있지만, 학교 공사를 중지시켰다. 샘플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별도의 검사를 의뢰해 둔 상황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1일 광주 동구 소재 동남초등학교 건축 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